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

2017. 7. 25.

관계부처 합동

순서

I.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1
II.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5
1. 소득 주도 성장	5
2. 일자리 중심 경제	9
3. 공정 경제	13
4. 혁신 성장	16
III. 경제정책 기반 강화	21
1. 리스크 관리	21
2. 정책 인프라 혁신	24
IV.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향후 전망	27
【별첨1】 주요 과제	32
【별첨2】 2017년 상세 경제전망	37
【별첨3】 실행계획(Action Plan)	44
【별첨4】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47

I.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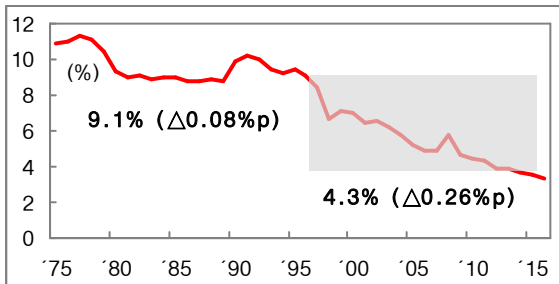
1. 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 우리경제는 '95년 이전에는 성장률이 완만히 둔화(연 0.08%p), '95년 이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급격히 하락(연 0.26%p)

○ 반면 선진국들은 경제가 성숙하면서 안정적 성장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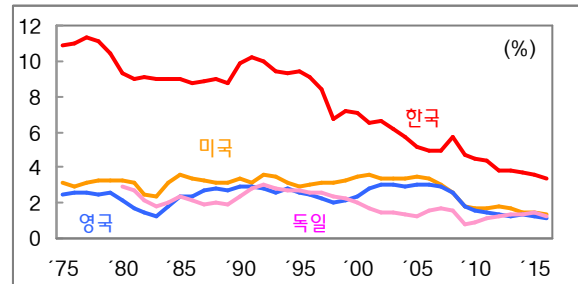
□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며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의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

한국 장기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선진국 장기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OECD

2.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패러다임 지속에 기인

□ 고도성장을 위해 물적자본 투자 중심으로 양적 성장 결과를 중시하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 추진

○ 물적자본 투자 중심 성장과정에서 고용·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 상대적 부족 → 가계-기업 불균형 야기

○ 양적 성장 중시로 대기업·제조업·수출에 지원 집중 →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내수·수출 불균형 야기

○ 추격형 성장전략은 모방·추격 대상이 사라지면서 유효성 상실

⇒ 과거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없이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주요국과 달리 정책기조 전환이 지체

* Inequality & Unsustainable Growth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IMF, '11)

3.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사람 중심 경제」

① 소득 주도 성장 :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

- 가계-기업, 가계간 소득 격차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미비로 사후적 격차 축소 기능도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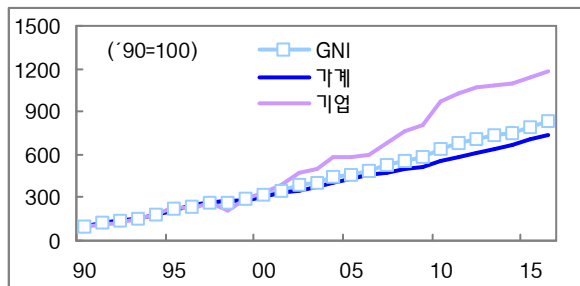
* '00~'16년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

**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GDP대비, %, '16년) : (한국) 10.4 (OECD평균) 21.0

-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비위축으로 성장에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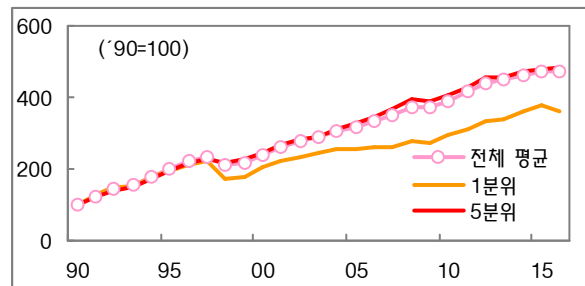
⇒ 가계를 분배 객체→성장 주체로 인식 전환, 소득증대 노력 강화

가계-기업소득 추이



* 자료: 한국은행

분위별 가계소득 추이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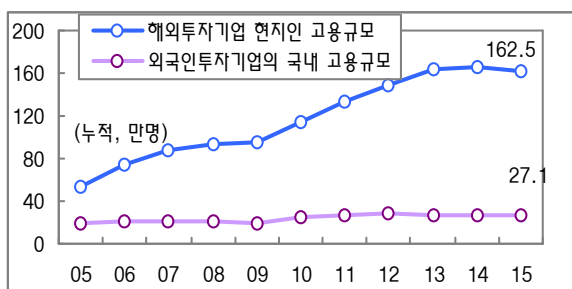
② 일자리 중심 경제 :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복원

- 제조업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관행·제도로 인해 일자리 질 악화

* 취업유발계수(명/십억원, 쉐산업) : ('90)65 → ('95)40 → ('03)18 → ('1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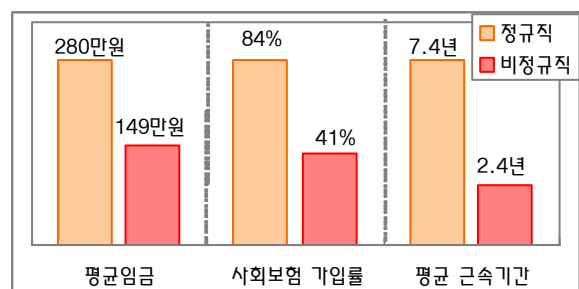
⇒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해외투자·외국인투자기업 고용추이



* 자료: 대한상의, 수출입은행, 코트라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 자료 : 고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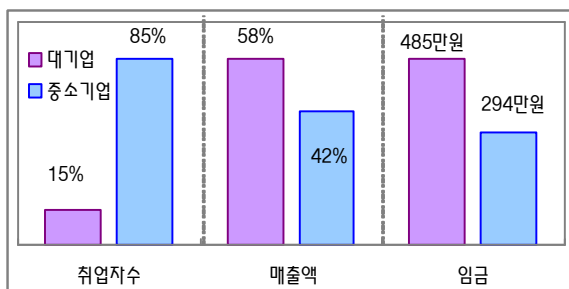
3 공정 경제 :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

- 공정경제 정착이 더딘 것은 폐쇄적인 거버넌스 구조, 이권 추구(rent-seeking) 행태*, 사회적 자본 부족 등이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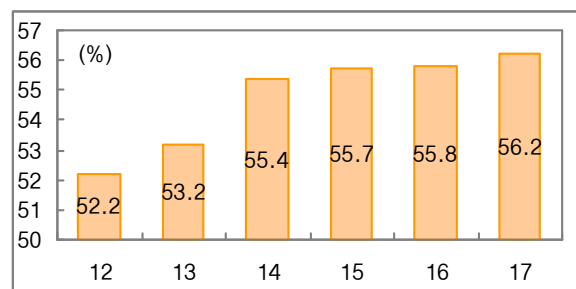
* 이익집단 등의 경쟁을 가로막는 이권추구 행태가 정부규제 등에 의해 보호

⇒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사회보상체계 혁신

대-중소기업간 격차



4대그룹 매출액 비중(30대 그룹대비)



* 통계청, 한은 ** 취업자수, 매출액은 전체 대비 비중 * 자료: 공정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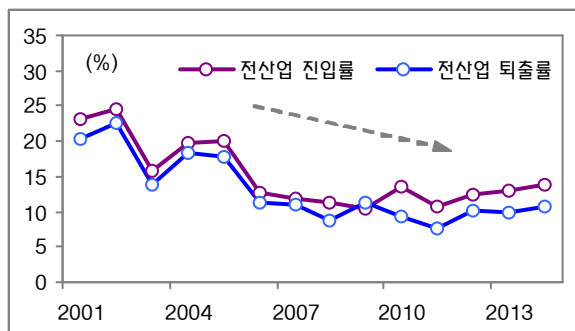
4 혁신 성장 : 3% 성장능력 갖춘 경제 유지

- 과도한 규제나 관행 등이 융·복합 등 창조적 파괴를 제약, 고용의 80% 이상 차지하는 중소기업도 혁신역량 약화

* 상품시장 규제는 OECD 4위, 무역규제는 OECD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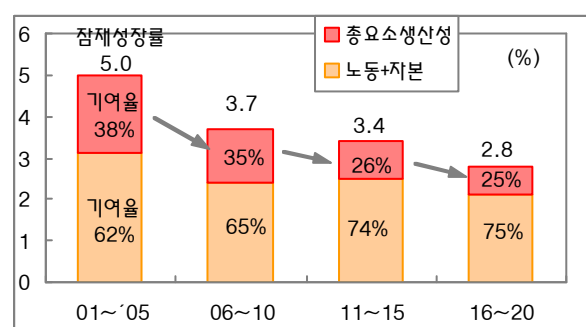
⇒ 경쟁제한적 제도혁신, 혁신 中 企육성 등으로 생산성 중심 경제 전환

진입률과 퇴출률 추이



* 자료: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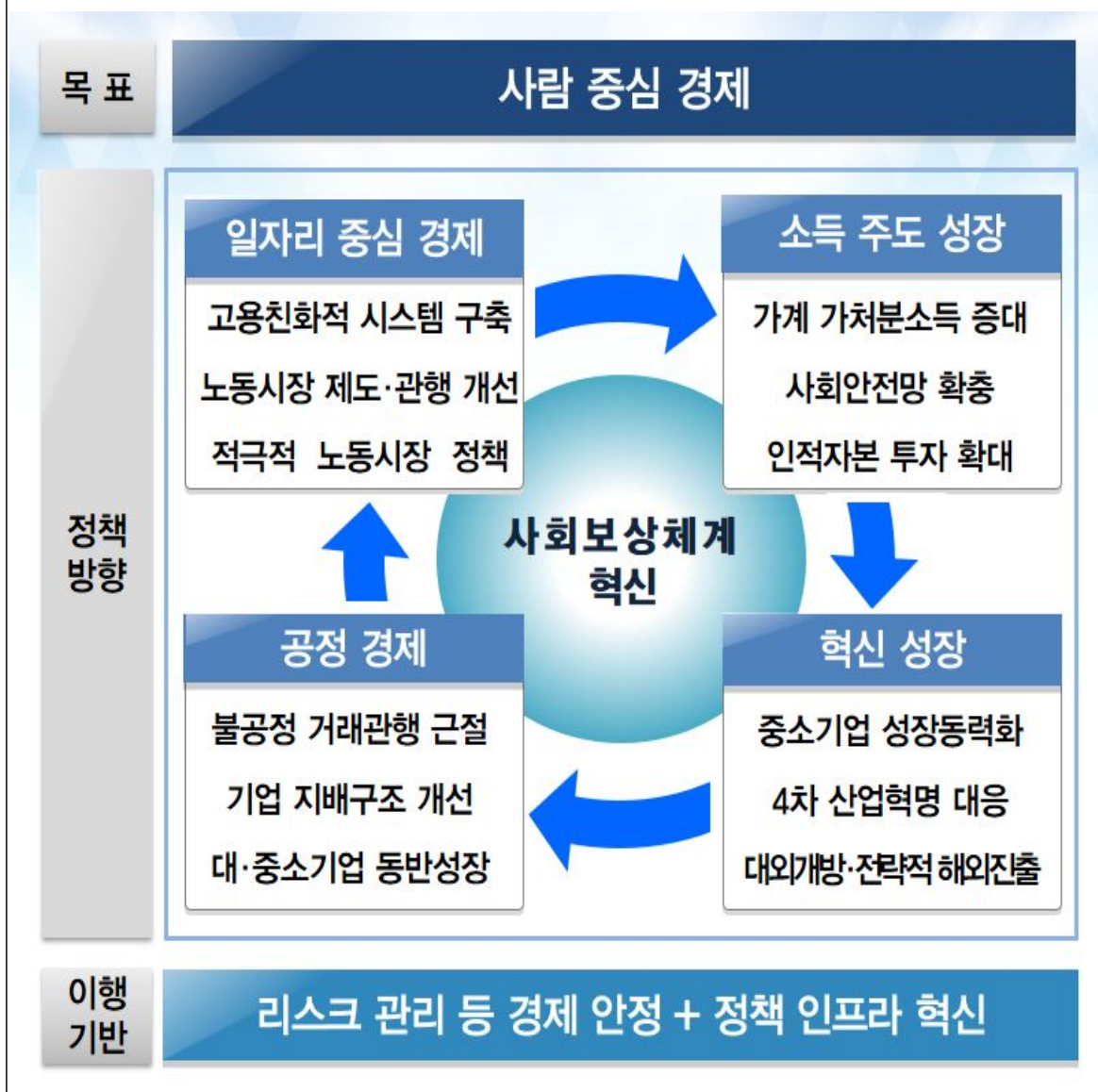
잠재성장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 ◇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경제성장을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중심·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의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
 - 경제체질을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공정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경제전반으로 골고루 확산 유도
- ⇒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



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1. 소득 주도 성장

◇ 경제정책 중점을 국민의 인간다운 삶, 기본생활 보장에 두고
가계소득 증대를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

①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

-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
 - 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공정질서 확립 등 경쟁력 제고 추진
- * 과거 추세 상회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을 통해 직접지원('18년 3조원 내외)
- 관계부처 TF 통해 지원대상·지원금액·전달체계 구체화, '18년 예산안 등 반영
-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① (주거) 연17만호 공적임대주택 공급으로 OECD 평균 이상 공적임대주택비율 달성(6.3→9%) 및 운영관리체계 개선*

- * 입주시기 예측 위한 대기자명부제도 도입,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 통합 등
-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 공공임대 공급물량의 30%인 20만호 공급, 전용 주택금융상품 출시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확대·지원금액 단계적 현실화, 중증장애인에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세어형 임대주택(5만실), 역세권주변 청년주택(20만실), 기숙사(5만명) 등 총 30만실 공급
- ▶ 특히, 청년층 수요 높은 도심내 공적임대주택 5만호 확충

※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만호(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병행), 매입임대리츠 2만호, 노후주택 리모델링 1만호 공급

- 생계비 획기적 절감, 한계주담대 차주 지원을 위해 주택 주택파이낸싱 개편(Sale&Leaseback) 확대

※ 주택기금, LH, 주담대 취급은행 등이 출자하여 리츠 설립, 한계차주가 주택을 리츠에 매각 후 임차 거주(재매입 가능) * 주택시장 상황 연계 시행

② (의료)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추진('15년 63.4%)

-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
-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 설정
- 40대 이상 진단바우처 도입,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대상 확대

③ (교통) 수도권 출퇴근시간 30분 단축, 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광역 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 편안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도로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등 도로·철도 공공성 강화, 공공형 택시 시·군 보급 등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

④ (통신) 요금감면제도 확대, 경쟁활성화로 통신비 인하 유도

- 기초연금수급자 월 1.1만원 신규감면, 저소득층 월 1.1만원 추가감면, 요금할인을 20→25%로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위법 행위 조사·시정 등 통신시장 투명화

⑤ (교육)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대학생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②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취약가구의 적정소득 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EITC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는 7분위 이하 중증장애인·노인 포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 자활대상자 확대,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자립 지원
-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여 실업안전망 대폭 확충,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 기반 강화
 - ▶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 실업급여 보장성을 ‘22년까지 OECD 평균수준 개선 추진

- ① 1단계 :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50→60%) 및 지급기간 연장(8→9개월), 65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단계적 가입 허용(‘18년)
 - ② 2단계 : 노사상생, 포용적 일터혁신 등 생산성 향상과 연계하여 지급수준·기간 등의 대폭 확대 논의 본격화
- 저출산·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및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운영
 - (유년)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급(‘18 : 30만원, 3개월 → ‘19 : 50만원, 6개월), 향후 저소득 근로빈곤층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18 : 25 → ‘21 : 30만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상향 검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단가인상
 -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 경감,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추진
 - (장애인)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등 비장애인과 격차 축소
 -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등
- ※ (농어업인) 선제적 수확기 쌀 수급안정, 생산조정제 한시 도입,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 확대

3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 강화

- 경쟁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인재 육성
 -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필수교과 축소·선택과목 확대 등 학생중심 교과과정 개편
 -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1수업 2교사제 도입 등 단위학교 지원 확대
 -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 확산,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산 등 추진
 - 고교학점제 도입,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및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추진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강화* 등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 교육급여 지원단가 인상 및 교복비·수학여행비 등 지원 지자체 전국 확산, 취약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신설, 국비 유학프로그램 확대 등
-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 확대하여 저소득층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 中企 재직자 계약학과 지원 확대
 - 직업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직업계고교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운영
 -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 개발,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 K-Mooc 강좌 확대 추진
 -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2. 일자리 중심 경제

◇ 가계소득의 핵심인 **일자리**의 양적 확충·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 - 분배 - 성장”의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

1 고용 친화적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으로 고용없는 성장 극복

-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 설치, 일자리상황판 운영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 (예산)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배분
 - 지자체 예산편성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지자체 합동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강화
 - (세제)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등 고용중심 세제개편
 - * (고용증대) 고용증가에 비례한 기업 세액공제(최대 2년간) 신설
(비정규직) 中企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시 법인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
(임금인상)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조정 등
 - (정책금융) 고용실적에 따른 금리우대·이자환급 강화
 - * 현재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산은, 수은) 및 보증료 할인(신·기보), 고용실적에 따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중진공) 등 운영중
 - (투자유치제도) 제조업 해외이전 축소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개편(양질의 일자리 지키고 만들기)
- ▶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 무관 최우선 지원

※ 외투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을 등 각종 투자유치 제도 통합

- ① 고용효과에 따라 세제·입지·현금지원을 외투지원 수준으로 강화
- ②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지원대상 확대
- ③ 경제특구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외투기업 수준으로 지원
- ④ 외국인투자 금지·제한 업종 전면 재점검, 원칙적 개방

- 공공부문이 모범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 강화
 - 국민안전·치안·복지·교육 분야 공무원 일자리 대폭 확충
 -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
 - *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대폭 확충하여 보편적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0세아, 노인) 등 보건복지전달체계 혁신
 -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임금수준 공시 등 단계적 처우개선 추진

2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으로 일자리 질 제고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상시·지속업무 등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방안 마련
 - *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
-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 비정규직을 포함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 건설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

-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당 68→52시간),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로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
 - *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 운영, 근로시간 특례 제외업종 및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병행
-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중대 재해 발생시 처벌강화 등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 *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제도개선

3 사회가 함께 만드는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를 총 재정지출 증가율 이상 지속 확대
-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혁신**
 - **영세자영업자·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훈련 실시**, 산업별로 자격·교육, 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SQF) 설계
 - 폴리텍 훈련과정을 혁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별 신기술 교육·훈련 거점으로 조성
 - 맞춤형 경력설계 지원 등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 * 고용서비스 정보망을 연계·통합하여 개인별 이력관리, 내일배움카드 활용 생애전환기별 직업능력개발 컨설팅 지원 등
- 공공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 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노력 확대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정책 관련 핵심 정보 생산을 위한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 청년·여성·신중년 등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청년)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 상향(3→5%),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도입 및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추진**
 - * (의무고용제) 민간부문도 청년 신규채용 권고, 인센티브 도입 방안 검토 (추가고용장려금) 청년 3명 정규직 채용시 1명분 임금 지원(17:3천명→18:2만명)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 **(여성) 새일센터 확충(150→175개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등 경력단절 극복**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확대, 직장내 성차별 완화 등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노력 병행
 - **(신중년) 희망퇴직 남용방지,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 등 전직·재취업(인생3모작) 지원 강화, 사회공헌일자리 확대***
 - * 퇴직전문인력-NGO-사회적 기업 연계

4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중앙-지방,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등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정비**
- **취약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고용형태 다양화 등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 반영을 위해 노사관계 법·제도개선 추진**
 - *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 관련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
-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등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확충**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생계·인격침해 보호 등 권리구제 강화***
 - *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선, 직장내 괴롭힘 관련 종합대책 마련 등
-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예 : 광주) 확산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3. 공정 경제

- ◇ 공정경쟁 촉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욕 제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강화

①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로 공정한 성장기반 강화

-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해소 위한 ‘을지로위원회’ 설치 추진
 - *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병행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17년~)
 - 대·중소기업간 동등 교섭을 위해 단체구성권 확산(가맹점법 → 대리점법), 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를 인정
 -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방안 마련
-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주가조작 범죄 엄중 처벌 및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 및 분식회계·부실감사 제재 강화
-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와 분담 등 불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운영 →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 전속고발권 폐지 등 종합적 제도개선방안 마련

② **담합 행위 근절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규제 전면 재점검

* 국민경제 관점에서 규제의 비용·편익을 점검·공론화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규제개선(예 : 규제청문회, 국민참여 쌍방향 규제신문고 등)' 추진

** 단속→사전예방 중심으로 규제행정 전환, 소상공인 부담경감 위해 규제차등화 추진

○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과징금 상향,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 확대(20→30억원) 등 선진국 수준으로 제재 강화

* 담합 과징금 부과율 상한 : (한국) 10% (미국) 20% (영국) 30% (EU) 30%

○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 조성방안 마련

* 취약·소외계층의 합리적 경제활동 유도를 위해 경제교육 강화

③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과도한 경제력집중 완화**

○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등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차단

-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추진
- 총수일가 등의 실질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추진

○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 소액주주의 경영권 견제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진

○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으로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

*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 반영('17.下), 추후 기금운용평가 반영 검토

4 동반성장 촉진 및 골목상권 보호 강화

-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 유통망 공유 등 다양한 동반성장 모델 발굴·확산,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통해 지원

* (협력이익배분) 대기업 이익→중소협력사 공유·출연시 세액공제 (상생협력기금)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 확대 (성과공유) 기업이익을 근로자와 공유시 세제지원 방안 강구 (상생결제)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

-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권고기간 연장, 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 영업제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

-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화·협업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과밀업종 종사자 재취업·재창업 지원

5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대안 마련, 사회적경제 정책조정·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 구축 추진
- 사회적경제가 시민경제 및 농어촌 등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 지원
 -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등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 공공조달 가점제도·대기업 연계 유통 등 판로확대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규모화 촉진
 -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희 국공유 시설 활용 위한 제도 개선
 - 도시재생분야 진출 지원('17년), 지역 일자리사업과 연계를 강화('18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도

4. 혁신 성장

- ◇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개방확대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

①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 촉진

- 중소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 강화
 -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집중 육성, '22년까지 6.5만개 일자리 창출 추진
- 수요자·공급자가 어우러져 기존산업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참여형 혁신·융합공간(Creative-lab) 구축
 - * 예)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등
- Rent 배분체계를 '직접지원 → 인프라·협력생태계 조성' 전환

- ① (수평적 네트워크)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 구현
→ 협업기업 중심 연구개발·금융·판로 등 지원체계 구축
 - ② (상생형 네트워크) 밸류체인에 기여한 만큼의 성과보상, 동반성장
→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통해 뒷받침
 - ③ (개방형 네트워크) 글로벌 시장진출, 국내 대기업과의 교섭력 제고
→ 중소기업 수출역량 지원 강화, 전속거래구조 개선
-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화 지원 강화
 -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창업 수준으로 정부정책 우대
 - * 협업사업을 위해 中소 공동출자로 설립 → 정부가 성장 가능성 높은 회사 선정·지원
 - 네트워크형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중소·중견 기업 협업화 촉진
 - * 컨소시엄, 공급체인 등 기업 네트워크에 대출, 투자, 경영컨설팅 종합 지원
 - 중소기업간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발굴·개선
 - * 예)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 적용 배제 등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복원하여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 고용창출 우수기업 中企 졸업유예기간(3년) 연장 및 정부 법령·지원제도 조사 후 中企 성장걸림돌 발굴·개선
 -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등 자금조달 여건 개선
 - 중소·벤처기업 해외직접판매 촉진,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등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강화
-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ICT 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를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 인재유입 촉진, 재교육 확산
 -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 R&D 전문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 신설·운영
 - 기업성장 후 주식·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22년까지 선도기업 10만개 달성)
-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으로 혁신창업 활성화, 기술창업자 5.6만명, 재창업자 5.5천명 육성
 -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엔젤투자 활성화·펀드조성 확대 등 추진
 - 창업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공공조달 의무구매제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 M&A 규제완화·세제특례 등으로 원활한 회수환경 조성
 -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창업 7년이내), 사업 실패자 소액채납세금 한시 면제 등 재도전 인프라 확충
 - *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성실실패자 맞춤형 패키지 지원 병행

②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8월)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3/4분기)
-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초지능·초연결 기반 구축
 -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기구 통합 등 컨트롤타워 강화
 - * ①과학기술총괄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 및 정책-예산-평가간 연계 강화, 기초원천분야 R&D는 총괄부처, 타부처는 특정산업 기반 R&D로 역할 분담
 - ②R&D관련 규정·시스템·서식 일원화·간소화,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③정부R&D 정보개방 확대, 해외 과학기술인 등과의 교류 확대
 - 핵심기술 R&D·인재양성 집중 투자, 청년과학자·기초연구 지원 등으로 지능정보기술 선진국 대비 75→90% 수준 제고
 - * (R&D혁신) 중소기업 R&D사업 상시모집체계 전환, 지원규모·기간 확대 등 (청년과학자) 근로계약 체결, 적정임금·연구성과 보상기준 마련 등 (기초연구)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최초혁신 실험실 연구비 지원
 - 5G·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 소프트웨어 공공시장 혁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마련
 - * '17년 IoT 전용망 구축, '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19년 5G 조기상용화
 - AI기반 사이버 보안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격차해소 계획 수립·시행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역기능 대응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제조-ICT-서비스 융합, 리쇼어링 등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
 - '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확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 수립('17년)

-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 수립('17년), 핀테크·공유경제 등 고부가·융복합 新서비스 집중 육성('18년 공유경제 종합계획 마련)
 - * ICT·SW 활용을 통한 영세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병행
-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규제없이 신기술 테스트 허용),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등 규제 전면 혁신
-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을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선정,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 집중지원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 확산 등 미래에너지 발굴·육성을 통해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 *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 추가도입, 에너지바우처 중증희귀질환자 가구 추가
 - **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등 병행 추진

분야별 미래산업 육성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친환경·스마트카	충전인프라 확충 등 전기차·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자동차-ICT융합 플랫폼 구축, 전기차·수소차 안전기준 마련
첨단기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첨단 신소재·부품 개발,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VR·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바이오·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R&D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제약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성장 생태계 구축
자율협력주행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도로 등 구축, '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드론산업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 마련 및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 추진
표준·인증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대응지원 센터 운영,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 신산업 표준·인증제도 혁신
스마트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에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등 영농창업 활성화
에너지신산업	IoE(Internet of Energy) 인프라 구축 및 新비즈니스 창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미터(AMI),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 육성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조성, 서비스 인증제 시행,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존 확산, 체감형 선도 서비스 보급 등 국내외 확산사업 추진

-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균형발전 촉진**
 - 혁신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 지원
 - 14개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선정 및 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
 - 도시재생과 연계, 창업·혁신공간, 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3 포용적 대외개방 확대, 전략적 해외진출 추진

- 보호무역주의, NEXT CHINA 대비 새정부 통상전략 수립
 - 아세안·인도와의 기존 FTA 고도화 등 거대 신흥시장과 맞춤형 경제협력 강화, 신규 FTA 협상 적극 추진*
 - * 남미공동시장(브라질 등 5개국),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등 5개국) 등
 - 통상 선진국가간 공조, G20·ASEM·APEC·WTO 등을 활용하여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
- 인도·아세안·일본·러시아 등을 동북아플러스 중점 경제협력국으로 선정하여 대외경제협력 역량 집중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40% 이상 확대, 청년 해외진출 촉진
 - 국가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 수립 및 맞춤형 지원 강화로 수출기업화 촉진
 -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에 융자지원하는 건인금융 출시(‘18년까지 1조원)
 - K-Move센터 재정비, 국제금융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확대 등 해외일자리 지원 강화

Ⅲ. 경제정책 기반 강화

1. 리스크 관리

- ◇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부동산시장·한계기업 위험요인 관리, 생활물가 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화

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및 취약차주 지원 강화

- '17년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 수로 연착륙
 - DTI 부채·소득 산정방식 개선(新DTI), DSR을 全금융권에 단계적 도입 등 여신심사 체계 합리적 개편
 - 제2금융권 주담대 →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 전환 유도
 -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 정교화*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 부동산임대업 대출 관리 강화,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여신심사 합리화
-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및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 대부업법(27.9%)·이자제한법(25%) 최고금리 일원화 및 20%로 단계적 인하, 비소구 주담대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
 -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 정리,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범위* 확대, 사잇돌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기관 확대
 - * 현재 의무가입기간내(3~5년) 인출 또는 해지시 과세(퇴직·폐업 등 사유 제외)
 - 원스톱 서민금융체제 구축,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소요비용 지원 검토
 - 지역에서 예금수취 금융기관에게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 대출 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제도 추진

2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 부동산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하여 가계 및 경제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
 - 시장상황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완료(주택법 개정 → 과열·위축지역 지정)
 - * 지역별 시장상황(과열·위축)에 따라 규제 및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
 - 국지적 과열발생시 즉각적인 안정화방안 추진,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
-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을 위해 청약제도 등 개선

3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산업·기업구조조정 추진

- 조선업에 대한 리스크를 전면 점검하여 부실정후기업 신속 정리 및 산업 차원의 경쟁력 제고 병행(건설업, 12월)
 -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조선 밀집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방지를 위한 지원 확대**
 -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17년), 한국해운연합(KSP) 결성, 외항선박에 친환경 선박 폐선보조금 지급,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 해양산업클러스터 2개 지정 등
 - ** 소상공인 정책자금(4→6천억원), 조선업 특례보증(1→2천억원) 확대
- 효과적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P-Plan** 등 새로운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도산기업 관리 담당 독립행정기구 도입 검토
-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을 위해 사업재편 기업 인센티브 강화, 매년 50개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지원 추진
 - * 기업활력법 성과를 점검하여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충, R&D 지원의 실효성 제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11월)

4 현장중심 생활물가 관리 강화 및 인플레이션리 확산 방지

- 기상재해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 수급안정
 - * 계란 할당관세 연장(~12월), 수산물 할인대축제(8월), 배추(5천톤)·양파(2천톤) 비축물량 탄력방출, 고랭지배추 예비묘 150만주 공급체계 구축 등
- 주요 프랜차이즈 심층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 연계 가격감시 강화, 사재기·편승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
-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시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흡수

5 통상현안 및 美 금리인상 등 대외불안요인 관리 강화

-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무역·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등 분야에 걸쳐 상호호혜적 협력 촉진
 - FTA 개정협상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 대비
-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 추진, 제3국 공동진출·일대일로 연계 등 공동 관심분야 협력 강화
 - 사드 관련 우리 국민·기업의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 및 지원, 對中 수출품목 경쟁력 향상 병행
- 자금융출입 변동성 확대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 운영,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방지 노력 경주
 - '18년 ASEAN+3(한중일) 공동의장국 수입을 계기로 다자간 통화스왑(CMIM) 협정문 개정 등 역내 금융안전망 정비

2. 정책 인프라 혁신

- ◇ 재정·공공·정책금융 등 정책 지원체계를 원점 재검토하여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

①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선도적 투자 확대

- 향후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
 - OECD 최저인 재정의 분배개선율('15년 13.5%)을 10%대 → 20%대로 제고하고, 재정의 분배개선 효과 분석 추진
 - * 지니계수 개선율(%,'14) : (獨)42.2 (佛)42.0 (英)31.3 (美)22.4 (韓)13.5('15)
 -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16년 10.4%)을 고령화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확대
- 조세정책은 일자리 창출·소득분배에 역점을 두고 재설계
 -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 지원, 고소득·고액자산가·탈루소득 과세 강화 및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 '17년중 조세·재정 개혁 특별기구 설치, '18년 개혁보고서 작성·보고
- Zero-base 예산을 통한 제대로 된 양적·질적(사업구조·집행 체계 개편)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 유지 병행
- 자동안정화 장치 강화*, 국채발행제도 개선** 등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제고하여 구조개혁 부담 완화

* 주요국 사례 분석 등을 거쳐 중장기 제도개선방안 강구('17.下 연구용역)

** 세수결손 등 예기치 못한 경제상황 발생시 총국채발행 한도내에서 국채 발행을 탄력 조정하는 등 안정적 자원조달방안 검토('17.下 연구용역)

2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공공부문 핵심가치로 재정립

-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운영·관리·평가체계 전면혁신
 -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고용 창출·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반영 강화, 지방공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 마련
 - 공공기관 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되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경영체제 내실화
 - 열린 공공기관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 공개내용 대폭 확대 및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
 - 정부·공공기관·구성원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국민 서비스 역량 제고
- 에타 대상규모 상향(現 500억원), 종합평가지(AHP) '고용·환경' 평가 실효성 제고, 사회적가치 신규지표 도입 추진('17.下 연구용역)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반영*, 종합심사낙찰제 고용관련 가점 2배 상향(0.4→0.8점)
- * 예) 임금적기 지급, 정규직 채용실적, 여성고용비율 및 일·가정양립 지원 실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헌 등

3 정책금융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로 혁신·역동성 제고

- 창업-성장-회수 등 성장단계별로 정책금융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여 민간참여 마중물 역할 수행
- 창업초기 기업에 직접투자하는 정책금융-벤처캐피털(엔젤 등)간 매칭 방식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400억원)

-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및 투자옵션부 보증 확대**
 - *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규모를 '자기자본금의 10% 이내 → 20%'로 확대 검토
 - **창업펀드(3천억원), M&A펀드(1조원), 해외진출펀드(2천억원) 등 민간자금과 협업하여 창업·성장 지원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
 - * 특히, 산은과 성장금융의 간접투자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중·후순위 구조 등)하여 민간자금의 참여를 보다 확대
 - 혁신기업 등에게 IR기회 제공, 창업자와 투자자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네트워크 지원 플랫폼* 강화
 - * 예) 산은 'KDB IR센터'의 'KDB넥스트라운드', 성장금융의 '쫄지마투자 IR' 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사후규제는 강화)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 유도
 - 법·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핀테크 등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개발·유통 여건 마련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도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④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연계, 서비스하는 열린 행정 구현

-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혁신플랫폼 '광화문 1번가' 오픈, 정보공개·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각종 온라인서비스·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 개통
-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서비스 제공, 공공 빅데이터 설치·운영 등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IV.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향후 전망

1. 하반기 경제여건① : 세계경제는 회복세 지속, 리스크 상존

□ 세계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유가회복 등에 힘입어 선진국·신흥국 동반 회복세 지속 전망

○ 그간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선진국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며 수출·소비·생산 증가

* (美) 양호한 고용여건으로 소비호조 (日) 수출·생산 증가, 경기부양효과 본격화 (EU) 소비회복, 美 소비호조로 수출·생산 확대

○ 중국은 수출 및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 자원신흥국은 유가 회복으로 성장세 확대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 '17.7월, %)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	일본	신흥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16년	3.2	1.7	1.6	1.8	1.0	4.3	6.7	△3.6	△0.2
'17년	3.5	2.0	2.1	1.9	1.3	4.6	6.7	0.3	1.4
'18년	3.6	1.9	2.1	1.7	0.6	4.8	6.4	1.3	1.4

□ 다만, 유가하락·통화기조 전환·보호무역주의 등 리스크 상존

○ 최근 유가는 美 셰일오일 증산 등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로 하락 → 하락세 지속시*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우려

* (상승요인) 세계경제회복, 산유국 정정불안 (하락요인) 美 증산, 산유국 감산합의 이탈

○ 연내 美 금리인상 및 자산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ECB 통화기조 전환 가능성 등은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美 트럼프 정부 경기 부양정책 관련 불확실성 증가도 세계교역시장 위협요인

1. 하반기 경제여건② : 국내경제는 회복모멘텀 다소 약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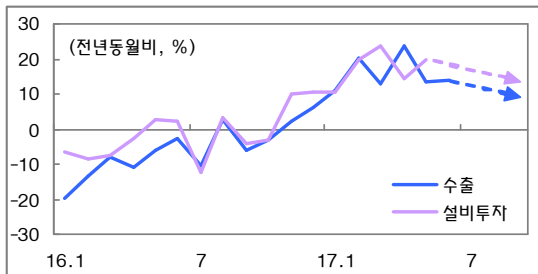
□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나, 성장모멘텀 다소 둔화 전망

- 상반기 견조했던 설비투자·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반면, 회복 모멘텀 부재로 소비회복은 지연

* (설비) 대규모 설비투자가 상반기에 집중 (수출) 유가약세로 상승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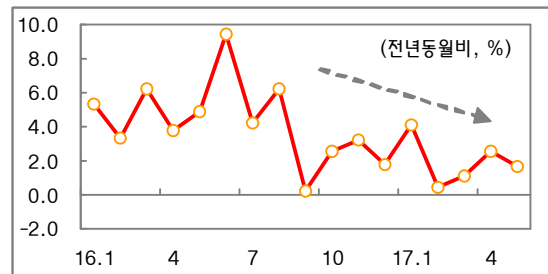
- 건설투자는 착공·분양물량 감소 등으로 완만히 둔화

수출·설비투자 추이



* 자료 : 통계청, 관세청

소매판매 추이



* 자료 : 통계청

□ 고용 증가세 약화, 물가는 안정세가 예상되나 리스크 상존

- 고용은 상반기 양적 개선세를 주도했던 건설업 호조가 약화 되며 증가세 둔화, 제조업 더딘 회복으로 고용의 질 부진 지속

* 취업자증감(1~6월, 만명) : (제조업)△6.8 (자영업)11.8 (건설업)14.4

- 물가는 유가 상승폭 축소 등으로 상반기 대비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폭염·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리스크 상존

□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 美 추가금리 인상 등 통화기조 전환 가속화시 가계부채·부동산 리스크 확대 우려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 관리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 새정부의 주요 정책추진과제는 하반기부터 신속히 이행

2. 하반기 정책과제① : **민생경제 조기 회복**

- 추경 3/4분기중 70% 이상 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주기적 집행현장 조사 등을 통해 불용률 축소 노력 강화(최근 5년 평균 3.9% → '17년 3% 이하)
 - 지방 교부세·교부금 정산분(3.5조원)을 활용하여 지자체 추경 독려(‘16년 40조원 → ‘17년 45조원 이상)
 -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0.7조원 보강
 -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 유지
 -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 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17.3/4분기중 시행예정)
 - 심리개선·여건조성·여력확충 등을 통해 국내소비 촉진
 -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아동)의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입비 50% 지원(1천억원 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 확대(30→40%, ~'17.末)
 -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 등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 관광벤처기업 발굴·육성, 관광산업 펀드 조성,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21년까지 테마여행 10선 추진), 관광두레 확대, 글로컬 관광지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 고궁 야간 개방 확대*, 지역 명소(광화문 광장 등)를 활용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방안 마련
- * 경복궁·창경궁 야간개방(8.13~19) 및 창덕궁 달빛기행(10월중 3회) 추가 실시

-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 제도 개선

* 한국형 체크 바캉스, '18년부터 제도설계 등 추진 ** '18년 관련 규정 개정

- 외국인관광객 성형수술비용 부가가치세 환급 일몰연장
('17.末→'19.末)

-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범위·환급시간 확대*,
카드 포인트 자동 캐시백 확산 유도** 등 잠자는 돈 활용 촉진

* (범위) 예금·신탁·외환 → 은행취급 펀드·ISA 추가 (시간) 9~17시 → 9~22시

** 카드업계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카드포인트 서비스 개발 유도

- 미수금 정산완료를 반영하여 도시가스 요금 인하(8~9%, 4/4분기)

□ 기업의 축적된 투자여력을 실제 투자로 적극 유도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4차 산업혁명 등 투·융자 확대 위한
2조원 규모 특별지원프로그램(산은) 운영 등 투자의욕 고취

-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하반기중
고속도로 등에 집중 설치(1천기 이상) 등 친환경 투자 확대

* '20년까지 누적 3천기 이상 구축 목표를 '18년 조기달성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17.末→'19.末), 폐선 촉진
보조금 도입(신조선가의 약 10%) 등 안전투자 확대 유도

2. 하반기 정책과제② : 구조개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가속화

□ 법령·지침 등 제·개정 필요 과제 → 하반기 즉시 착수

□ 재원 수반 과제 → 세법개정안·예산안 등 반영

□ 중장기 로드맵 등 방향설정 필요과제 → 종합계획 수립

[2017~2018년 경제 전망]

- (성장) '17년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전년보다 개선된 3.0% 성장
 - '18년은 투자가 다소 둔화되나, 일자리 확대·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가 개선되며 3.0% 성장 예상
- (고용) '17년은 수출·투자 개선, 건설업 호조, 추경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는 전년보다 개선된 34만명 증가
 - '18년은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등으로 36만명 내외 증가 예상
- (물가) '17년은 유가 회복('16: 41 → '17: 50\$/B),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영향으로 1.9% 상승
 - '18년은 소비개선 등 상방요인에도 불구하고, 유가·농축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1.8% 상승 전망
- (경상수지) '17년은 수출은 회복되나, 설비투자 증가 등 수입 확대, 中 관광객 감소 등으로 720억불로 둔화
 - '18년은 소비회복으로 상품수지 소폭 축소, 705억불 전망

	'16년	'17년	'18년
■ 경제성장률(%)	2.8	<u>3.0</u>	<u>3.0</u>
■ 취업자증감(만명)	30	<u>34</u>	<u>36</u>
■ 소비자물가(%)	1.0	<u>1.9</u>	<u>1.8</u>
■ 경상수지(억불)	987	<u>720</u>	<u>705</u>

1.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 구축 → 실업 두려움 없는 사회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상생, 포용적 일터혁신 추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 노동시장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 실업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 및 실업급여 보장성을 '22년까지 OECD 평균수준까지 개선 추진

- ▶ (1단계) 지급액 상향(50→60%) 및 지급기간 연장(8→9개월)
65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단계적 가입 허용('18년)
- ▶ (2단계) 지급수준·기간 등의 대폭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 본격 추진

○ 직업교육·훈련 혁신 : 평생능력개발·경력설계 지원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투자를 총 재정지출증가율 이상 지속 확대)

- ▶ 폴리텍 훈련과정을 혁신산업 중심 개편 → 新기술 교육·훈련 거점화
- ▶ 생애전환기별 직업능력개발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경력설계 체계 구축
-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 → 평생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등 확대 강구

2. 빈곤층 소득지원 강화 → 더불어 사는 사회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 (1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년~)
- ▶ (2단계) 소득 7분위 이하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제외('19년~)

○ 근로빈곤층 지원 → EITC 지속 확대(대상·지급액 확대)

* EITC 주요국에 비해 크게 미흡 : (지급가구) <韓>3.6% <美>8.3% <英>6.9%,
(가구당 지급금액) <韓>87만원 <美>298만원 <英>1,131만원

3. 도심내 공적임대 대폭 확충 + 주택파이낸싱 시스템 개편

-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내 직주 근접 임대주택 5만호 확충

구 분	주요 내용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2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복합 개발 ▶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대상 용적률 등 건축규제 법정한도까지 완화 ▶ '17년부터 1만호 공급 착수, 성과확산 통해 1만호 추가 공급
매입임대리츠 (2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츠가 주택을 매입, 청년·신혼부부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 ▶ 출자비율 상향(10→20%), 지역별 매입상한액 차등화하여 활성화
노후주택 리모델링 (1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후 리모델링, 재건축하여 청년 등에 공급 ▶ 도시재생 연계 등을 통해 '17년부터 적극 매입·착공

- Sale & Leaseback 방식 한계차주 주택매입

- ▶ 주택도시기금, LH, 주담대 취급은행 등이 출자하여 리츠를 설립
- ▶ 한계차주는 주택(주담대)을 리츠에 매각후 해당주택에 임차하여 거주
→ 임차기간(5년) 종료후에는 재매입 가능 ※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 시행

4. 지역 일자리 만드는 기업 최우선 지원 - 골고루 잘사는 사회

- 투자유치제도(지방이전기업, 외투, 유턴) 통합 → 고용효과 중심 재설계

- ▶ 고용효과에 따라 세제·입지·현금지원을 외투 수준으로 강화
-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지원대상 확대
- ▶ 경제특구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외투 수준으로 지원
- ▶ 외국인투자 금지·제한 업종 전면 재점검, 원칙적 개방

- 지역별 일자리창출 거점을 구축하고 세제·금융 등 집중지원

- ▶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 수립,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 선정
- ▶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지역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 창업·혁신공간, 문화·복지공간과 조화

※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 마련(12월)

5. 교육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 사회적 이동성 복원

○ 저소득층의 공교육에 대한 소요비용을 촘촘히 지원

- ▶ 부교재·학용품·교과서대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단가 인상
- ▶ 현장체험·수학여행·교복비 지원 확산(일부 → 모든 지자체)

○ 우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 취약계층 영재교육 및 우수인재(예술·체육 등) 육성사업 신설
- ▶ 자격증 취득 바우처 설계·도입 및 반값 등록금 확대

○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예산 지속 확대

- ▶ 저소득층 대상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
- ▶ 중소기업 재직자의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 확대(65 → 85%, 전문·학사)

6. 개별기업 지원 →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전환

○ 수평적 네트워크 :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 구현

- ▶ 중소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협업전문회사 도입 → 창업기업 수준 지원
- ▶ 협업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 금융, 판로 등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지원사업(36개 과제, 75억원) 확대
 - 정부 지원 사업시 中소 협업사업 우대 → 성과평가후 中소 협업화 전용사업 신설
 -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적용대상 확대(지자체→중앙정부·공공기관)

○ 상생형 네트워크 : 밸류체인에 기여한 만큼 성과보상, 동반성장(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통해 뒷받침)

- ▶ (협력이익배분) 대기업 이익→중소협력사 공유·출연시 세액공제
- ▶ (상생협력기금)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기환세 과세대상 차감 확대
- ▶ (성과공유제) 기업이익을 근로자와 공유시 세제지원 방안 강구
- ▶ (상생결제)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 중소→중견까지 확대

○ 개방형 네트워크 : 글로벌 시장확보 및 경쟁력·자생력 제고

- ▶ (In-Bound) 전속계약구조 개선 →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
- ▶ (Out-Bound) 수출금융 지원 강화 → 중소·중견 수출비중 40% 이상 확대

7.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통합형 성장 모델로 육성

- 전 부처의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시행 위한 추진체계 및 전담 조직 신설, 사회적경제기본법 정부 대안 마련 등 인프라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 위한 초기지원 강화

▶ 중소 정책자금내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 신설
▶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개편 등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강구
▶ 공공조달 가점제도(現 사회적기업에 운영중), 대기업 연계 판로·유통 지원 등을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으로 확대
▶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등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민간 경제교육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교육 확산 등)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규모화 촉진, 국민인식 제고 위해 평생학습도시를 사회적경제 학습기반으로 활용

* 일반 협동조합-개별법상 협동조합(농협·생협 등)간 연합회 설립 허용 등 규제완화
→ 협동조합간 연대협력 유도(現 일반 협동조합간 연합회 설립만 허용)

8.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 혁신 창업국가 도약

-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선도분야 선정, 패키지 방식 지원

▶ R&D 집중지원 및 테스트베드 구축(자율주행 실증도로, 드론전용 시험비행장 등)
▶ 활용도가 높은 공공·민간 빅데이터 구축·개방 → 공유 플랫폼 구축
▶ 신산업분야 사후규제 중심 네거티브 규제 전환, 핵심규제이슈 개선방안 마련
▶ 분야별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및 특성화 대학·학과 육성

-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

▶ (창업)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공모창투조합 활성화, 벤처확인제도 개편 등
▶ (회수) M&A 규제완화, 기술혁신형 M&A 세제특례 확대 등
▶ (재도전)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등

9.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 좋은 일자리 창출 저변 확대

○ 新 유형서비스 활성화 위해 규제개선 및 R&D 등 지원 강화

- ▶ 신산업 직종 발굴·육성 위해 교육·훈련과정 확충(유망직업 교육과정 개설 등)
- ▶ 고부가·융복합분야 신서비스 창출(핀테크, 공유경제 등) 위한 규제개선, 정부 서비스 R&D 투자확대('16년 0.6→'21년 1.3조원) 및 지원강화

○ 제품 기획·생산단계에서 제조업-서비스 융합 강화

- ▶ 제조기업의 서비스활용 컨설팅 강화, AI·빅데이터·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조기반 서비스업 혁신 및 고부가가치화

○ IT·SW 활용 등으로 저부가서비스(음식·숙박 등) 경쟁력 제고

10. 新 통상전략 수립 →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주도

○ FTA 네트워크 확대 등 새정부 통상전략 수립

- ▶ 신규 FTA 협상(메르코수르, EAEU 등) 및 기체결 FTA 개선(인도·아세안 등) 유통·관광 등 우리관심 분야 중심으로 한중 FTA 서비스시장 확대
- ▶ 對美(무역불균형·FTA개정 요구), 對中(사드 관련 中측 조치)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 통상교섭본부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등 해소노력 경주
- ▶ Next China 대비 위해 인도·아세안 등 협력 다변화
- ▶ 통상 선진국가간 공조, G20·ASEM·APEC·WTO 등 활용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 전략적 글로벌 시장 확보 및 中企·청년의 해외진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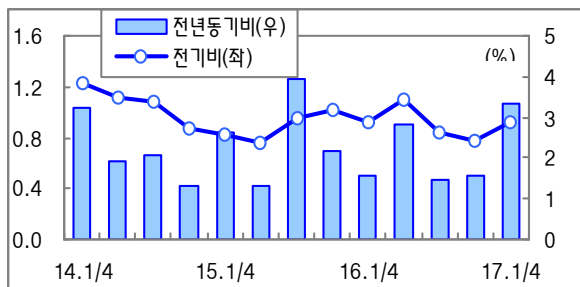
- ▶ 인도·아세안·일본·러시아 등을 중점 경험국 선정
- ▶ 금융패키지 추가 지원 등 해외인프라 수주지원 강화, EDCF 집행규모 연 10% 이상 확대 및 랜드마크형 인프라 사업 추진
- ▶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에 융자하는 1조원 규모 견인금융 출시
- ▶ K-Move센터 재정비, 국제금융기구 초급전문가 파견확대 등 해외일자리 지원 강화

1 경제 성장

① [실질 성장률] 연간 3.0%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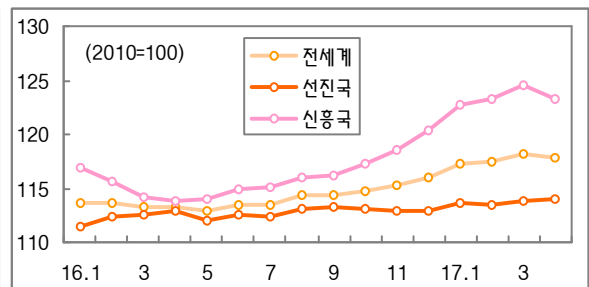
- 세계경제 회복, 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16년보다 개선된 연간 3.0% 성장 전망
 - 상반기 성장을 주도한 수출·투자 회복세가 하반기 소폭 둔화되나, 추경 등 정책효과 등이 하반기 성장세 보완
- 부문별로는 수출 및 건설·설비투자 중심의 성장세 시현
 - 설비·건설투자는 IT 업황 개선, 건설업 호조 등으로 확대되나, 소비는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으로 증가세 제약
 - 수출은 세계성장률 및 교역량 개선, 반도체 등 주력품목 호조 등으로 개선되나, 보호무역주의 등은 제약요인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세계교역량 추이



* 자료: CPB, 수출물량 기준, 3개월 이동평균

② [경상성장률] 연간 4.6% 성장 전망

- 디플레이터는 수출단가 개선에도, 유가 회복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물가상승률을 소폭 하회하는 1.6% 상승 예상
-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연간 4.6% 전망

③ [민간소비] 연간 2.3%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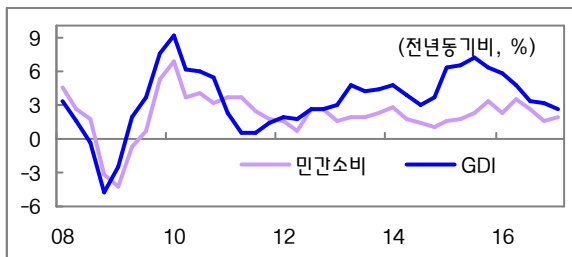
○ 임금 정체,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16년(2.5%) 대비 둔화 전망

- 최근 부진했던 소비심리가 개선되었으나, 임금상승률 및 실질구매력 둔화,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으로 회복 지체

* 실질임금 상승률(전년동기비,%) : ('14)1.2 ('15)2.7 ('16)2.8 ('17.1/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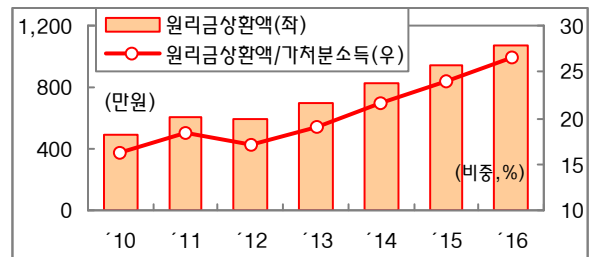
- 하반기 일자리 추경, 소비활력 제고 정책 등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되나, 시중금리 상승 등의 하방요인 상존

민간소비와 실질소득(GDI) 증가율



*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 및 원리금 상환액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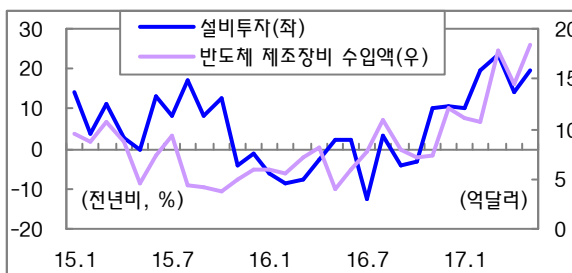
④ [설비투자] 연간 9.6% 증가 전망

○ 수출 증가, 글로벌 IT 업황 호조, 기업실적 개선 등 투자 여건이 개선되며 '16년(△2.3%) 대비 큰 폭 증가세 시현 전망

- 낸드플래시 등 대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 등에 힘입어 기계류 투자가 설비투자 회복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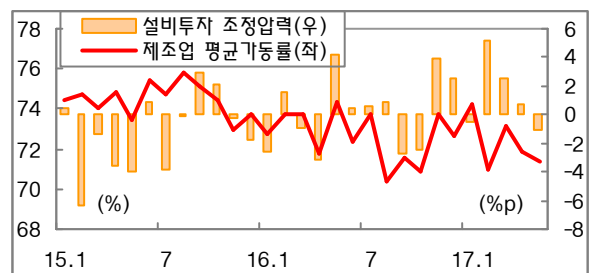
- 다만, 상반기 대규모 투자 집중에 따른 하반기 투자여력 약화, 제조업 가동률 부진 등은 하방요인

설비투자 및 반도체수입액



* 자료: 통계청, 관세청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 자료: 통계청

5 [건설투자] 연간 6.7% 증가 전망

○ 건설투자는 민간주택 건설 호조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나, 기저효과 등으로 '16년(10.7%)보다 증가폭 축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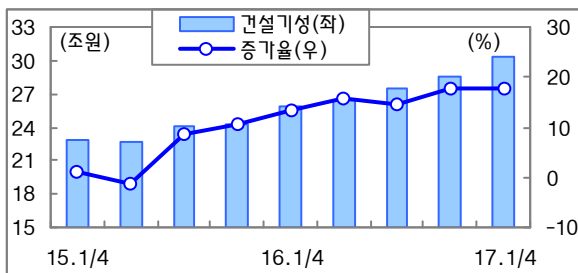
▪ 건물은 주택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분양물량·착공면적 감소 등 감안시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둔화

* 공동주택 분양(만호) : ('10~'14평균) 28.6 ('15) 52.5 ('16) 46.9 ('17°) 30

▪ 토목은 SOC 예산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둔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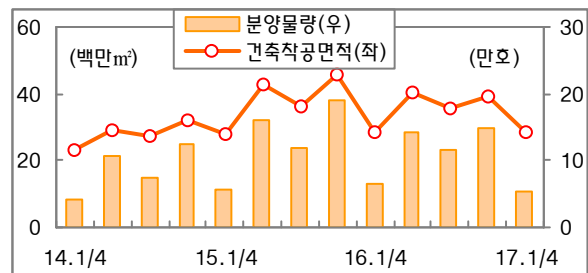
* 정부 SOC 예산(조원) : ('15) 24.8 ('16) 23.7 ('17) 22.1

건설기성 및 증가율 추이



* 자료: 통계청

분양물량과 건축착공면적



*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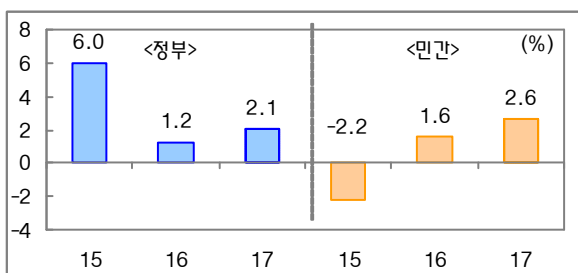
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연간 2.8% 증가 전망

○ R&D 투자는 IT 업황 호조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 예상

○ 소프트웨어 투자는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SW 개발수요가 확대되며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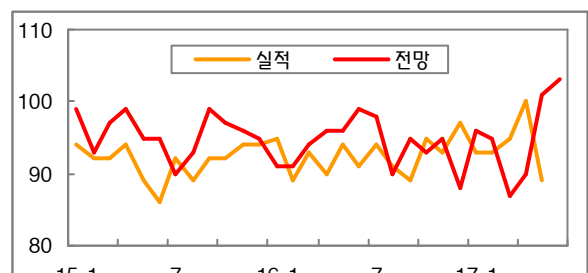
* '17년 新SW시장 전망(% SW정책研) : (클라우드)21.0 (빅데이터)25.2 (IoT)15.6

정부 R&D 예산 및 민간 R&D 투자 증가율



* 자료: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회

소프트웨어 BSI



*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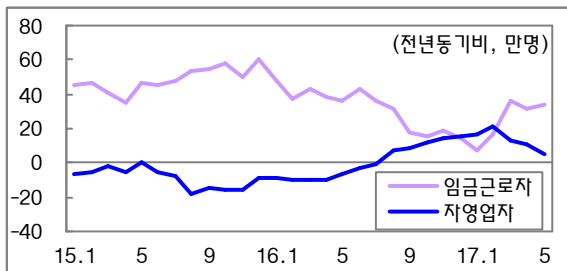
2

고 용 : 연간 취업자 34만명 내외 증가 예상

① [고용전반] 수출 회복, 건설업 호조로 취업자 증가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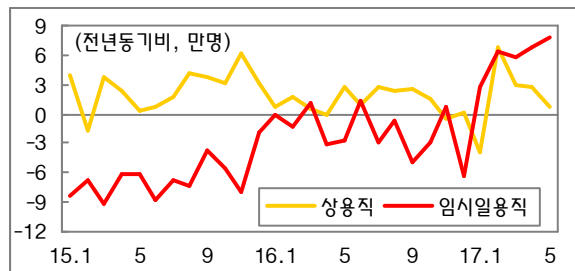
- 취업자 증가폭은 수출·투자 회복, 주택 준공물량 증가, 일자리 추경 등의 영향으로 '16년(30만명)보다 개선 전망
- 다만 일용직 증가 등 일자리 질이 낮고, 내수부진·자영업자 과당경쟁 심화 등의 하방위험 상존
- 고용률(15~64세) 66.7%로 작년(66.1%)보다 개선, 실업률 3.7% 예상

임금근로자·자영업자 추이



* 자료 : 통계청

종사상지위별 신규채용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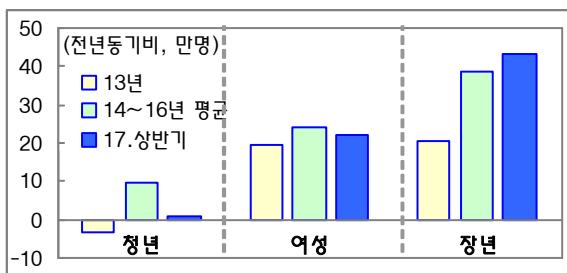


* 자료: 고용부

② [부문별] 여성·청년 구직활동 확대, 건설·서비스업 고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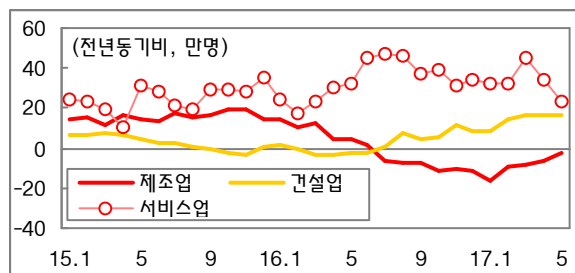
- 청년·여성은 맞춤형 취업연계 강화, 장년층은 인구증가 및 노동시장 잔류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지속
- * 에코붐세대(91~96년생)의 노동시장 본격 진입으로 청년 취업경쟁 심화
- 하반기 건설업 취업자 증가세 다소 조정,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 지속 전망

경제활동인구 증감



* 자료 :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3

소비자물가 : 연간 1.9% 상승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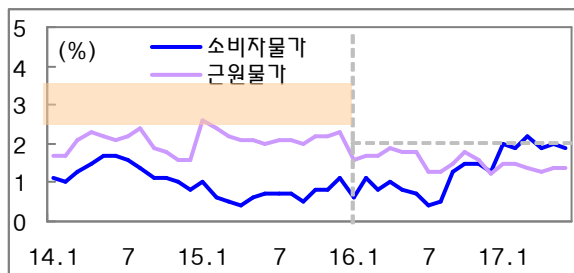
① [물가 전반] 공급측 상방압력 완화로 4/4분기부터 상승세 둔화

- 유가,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측 상방압력이 점차 완화되며 4/4분기 이후 상승세 둔화 전망

* '16.7~9월 전기요금 인하(Δ 18.8%)에 따른 기저효과는 변동폭 확대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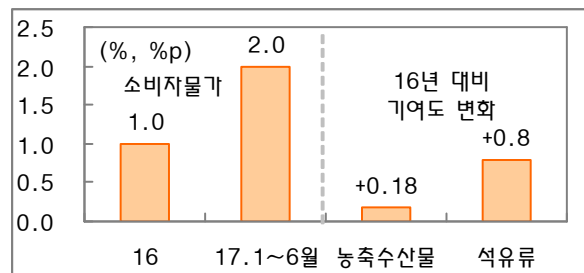
- 일시적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는 1% 중반의 안정세이나, 기상재해 및 AI 이후 생산기반 복구 지연 등은 불안요인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와 기여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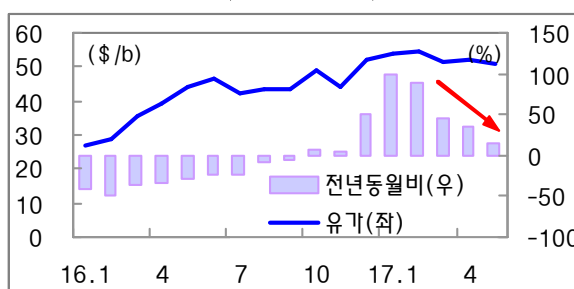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② [부문별] 석유류·농축수산물 등 물가 상승압력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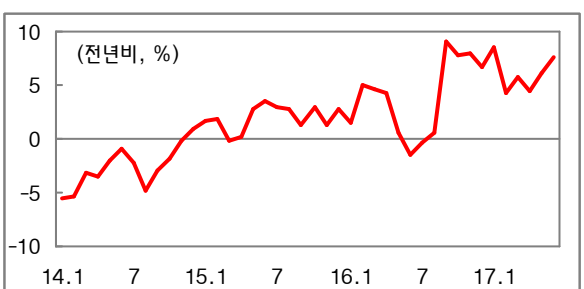
- 최근 국제유가 조정 움직임, 기저효과('16.下 46\$/B → '17.下^e 50\$/B) 등으로 유가 상승효과는 점차 축소될 전망
- 농축수산물은 '16년 하반기 기상재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오름세 완화가 예상되나, 계란수급 등은 불안요인

국제유가(두바이유) 상승률



* 자료: 석유공사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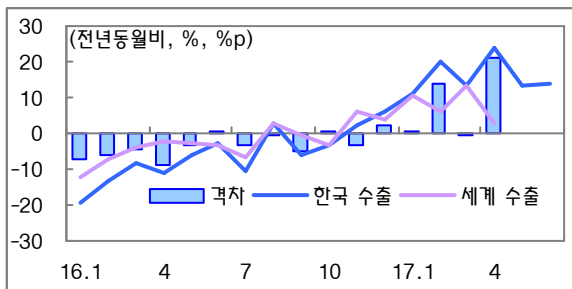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4 수출입과 경상수지 : 연간 통관 수출 10.2%, 수입 14.0% 증가 예상

① [통관 수출입] 수출·수입 모두 하반기 증가폭 점차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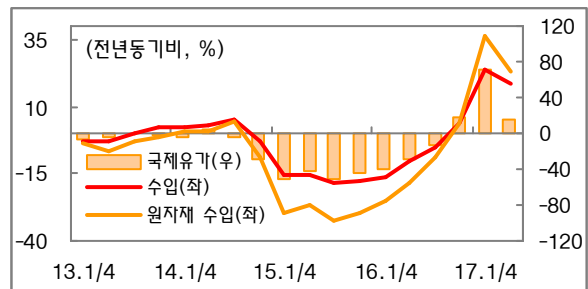
-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 IT업 호조 등으로 증가세 지속 예상
 - 다만, 유가 하락세 및 작년말 이후 수출회복에 따른 기저 효과 축소 등으로 증가폭은 점차 축소 전망
 - 보호무역주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수요위축 가능성, 유가하락에 따른 신흥국 경기부진 등 하방위험 상존
- 수입은 수출 개선,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증가세 지속 전망

우리나라 및 세계 수출 추이



* 자료: 무역협회, WTO

수입 및 국제유가 추이



* 자료: 무역협회

②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 등으로 720억불 흑자 예상

- 상품수지는 유가 상승,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흑자폭 축소 전망
- 서비스수지는 中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영향, 해외건설 수주 부진 등으로 여행·운송·건설수지 중심 적자폭 확대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14년	'15년	'16년	'17년 ^e
▶ 경상수지	844	1,059	987	720
▶ 상품수지	889	1,223	1,204	1,035
▶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45	△163	△218	△315

2017~2018년 경제전망 요약

(전년동기비, %)

	'16년 실적	'17년 ^e		'18년 ^e 연간
		1/4	연간	
전망 전제				
세계 경제(PPP) ¹⁾	3.2	-	3.5	3.6
Dubai 유가(\$/bbl)	41	53	50	51
실질 GDP	2.8	2.9	3.0	3.0
민간소비	2.5	2.0	2.3	2.6
설비투자	△2.3	14.4	9.6	3.0
건설투자	10.7	11.3	6.7	2.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3	2.7	2.8	4.0
경상 GDP	4.7	4.9	4.6	4.5
고용률(15~64세, %)	66.1	65.7	66.7	67.2
취업자 증감(만명)	30	36	34	36
소비자물가	1.0	2.1	1.9	1.8
경상수지(억달러)	987	194	720	705
상품수지(억달러)	1,204	280	1,035	1,012
수출(통관,%)	△5.9	14.7	10.2	2.7
수입(통관,%)	△6.9	23.9	14.0	4.1
서비스·본원·이전 소득수지(억달러)	△218	△86	△315	△307

1, IMF World Economic Outlook('17.7월)

별첨 3

실행계획 (Action Plan)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기발표된 과제들은 기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추가과제 중심으로 실행계획 마련

과제 내용		추진계획	부처
① 소득주도 성장			
영세 소상공인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관계부처 TF 통해 지원방안 구체화 및 '18년 예산안 반영('17.9월)	기재부 고용부 중기청
생계비 경감	·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 매입임대리츠 활성화	· 선도사업지 선정('17.9월) · 정부기관·지자체 대상 공모('17.9월) · 자금운용계획 변경('17.10월) * 자금 출자비율 상향	국토부 기재부
사회 안전망 확충	· ETC 지속 확대 · 실업안전망 강화	· 심층평가('17.12월)를 거쳐 대상지급액 확대 추진 · (1단계)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 지급기간 연장 등 고용보험 관계법령 개정 추진('18) · (2단계) 지급수준기간 대폭 확대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18~)	기재부 고용부
인적자본 투자 확대	· 교육급여 단가 인상 ·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지원 전국 지자체 확산 · 우수 저소득층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시스템 혁신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및 결정('17.7월) · 시·도교육청 협의('17.8월~) · 저소득층 우수인재 육성계획 수립('18) · 영재교육 지원 사업 추진('18~) · 저소득층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18) · 나노디그리 시범사업 추진('18) · 재교육형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 확대('18~)	교육부 기재부 중기청
② 일자리 중심 경제			
일자리중심 정책 재설계	· 고용영향평가 강화	· 고용영향평가-예산 연계 확대('18~) ·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도입('18)	고용부 기재부
	· 지자체 인센티브	·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일자리중심 개정('17.8월)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안 확정('17.9월) · 일자리 관련 우수자치단체 재정 인센티브 신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17.12월)	행자부
	·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신설	· 세법개정안 반영('17.8월)	기재부
	·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	·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 마련('17.12월)	산업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혁신	· 재직자 훈련 혁신방안 마련·발표('17.9월) ·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본계획 발표('17.12월)	고용부

과제 내용	추진계획	부처
③ 공정 경제		
담합행위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소송제 도입 및 과징금 상향 ▶ 공익신고자 보상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소송제 개선 소위원회 구성('17.下) ▶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18)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17.下) 	법무부 공정위 권익위 기재부
기업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 반영('17.10월) 	기재부
상생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법개정안 반영('17.8월) 	기재부
④ 혁신 성장		
중소기업 성장 동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기업중심 지원체계 구축 ▶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 ▶ 네트워크형 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네트워크 중심 전환방안 마련('17.12월) ▶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18) ▶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17.10월) 	중기청 중기청 금융위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4차 산업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패키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17.10월), 시범 실시('18) 	미래부 기재부
전략적 해외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 통상로드맵 마련 ▶ 건인금융 출시 ▶ EDCF 집행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 통상 로드맵 수립 및 추진('17.9월) ▶ 수출건인 프로그램 취급지침 확정('17.10월) ▶ EDCF 집행규모 연 10%이상 확대('17~'21)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⑤ 리스크 관리		
가계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및 취약차주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 마련('17.8월) 	금융위 기재부
부동산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탄력적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 실수요자중심 청약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 개정 기완료('17.7월),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7.下) 	국토부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민감업종 경쟁력 강화 ▶ 사업재편기업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7.12월) ▶ 기업활력법 성과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17.11월)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생활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불안 품목 수급안정 ▶ 소비자단체 연계 가격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관세 연장, 비축물량 방출 등('17.8월~) ▶ 하반기 특별물가조사사업 추진('17.8월~) 	기재부 농식품부 산업부

과제 내용	추진계획	부처
-------	------	----

⑥ 정책 인프라 혁신

재정의 선도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의 분배개선을 제고 재정의 경기대응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안 편성 반영('17~) 재정의 분배개선효과 분석 연구용역('17.12월~)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국채발행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17.9월~) 	기재부
공공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공공입찰 사회적 책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용역('17.8월~), 국가재정법 개정('18)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 개정('17.11월) 	기재부
정책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험자본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금융-VC간 매칭방식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17.8월~) 창업펀드, MBA펀드, 해외진출펀드 조성('17.4/4분기~) 	금융위

⑦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재정	집행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매월) 집행현장조사 실시(분기별 4건) 	기재부
	지자체 추경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편성 협조요청('17.7~9월) 하반기 재정 집행 방안 수립('17.8월) 지방교육재정 점검회의 개최('17.8월~, 매월) 	행자부 교육부
	공공기관 투자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투자계획기관 예산변경 의결('17.9월) 투자계획 이행여부 점검('17.12월) 	기재부 산업부 등
통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규정 개정('17.3/4분기)	한은
소비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입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전 사업추진 시행계획 수립('17.8월) 한전 지원사업 안내 및 사업 시행('17.9월~) 	산업부 (한전)
	고궁 야간개방 확대	야간개방 및 특별프로그램 추가실시 (8.13~19, 10.7.~10.21)	문화재청
	외국인관광객 성형수술비용 부가세 환급 일몰 연장	세법개정안 반영('17.8월)	기재부 복지부
	카드포인트 자동캐시백 확산 유도	카드업계와의 간담회 개최('17.9월)	금융위
투자	미수금 정산 반영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요금 인하 추진('17.12월)	산업부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세법개정안 반영('17.8월)	기재부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19년까지)	세법개정안 반영('17.8월)	기재부
	4차 산업혁명 투융자 확대 특별지원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 마련('17.8월)	산은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목표 조기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충전기 설치(~17.10월) 주요관광지, 상업시설 등에 추가설치(~17.12월) 	환경부

별첨 4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KDI)

※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조사('17.7.10~14)

◇ 국민들은 양극화·저성장을 우리경제 핵심 문제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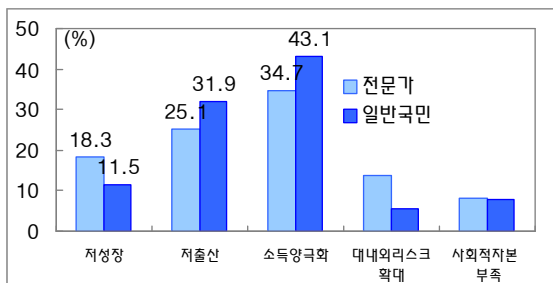
- 우선과제로 소득확충 및 일자리 창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일치

⇒ 「사람 중심 경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가상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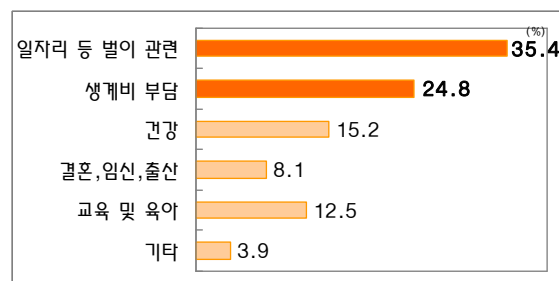
①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가 소득 양극화 심화 및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착화 지목

- 또한 국민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직면한 문제로 일자리 등 별이 관련 문제, 생계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인식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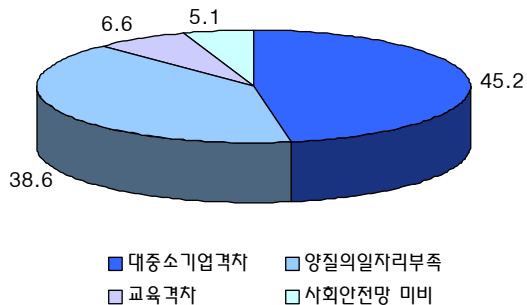


개인적 차원에서 직면한 심각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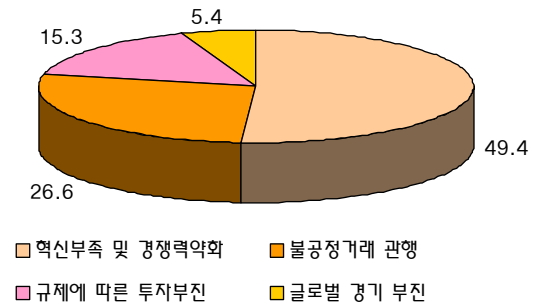


② 전문가는 양극화 원인으로 대중소 기업격차 및 일자리 부족, 저성장 원인으로 혁신부족·불공정 거래관행 등을 지목

소득양극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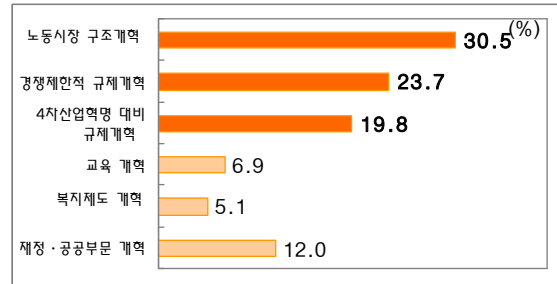


저성장의 원인



- 전문가는 경제성장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대비 제도개혁 등 혁신성장에도 관심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개선필요 분야



Criteria	Percentage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보장되는 국가	47.0%
혁신과 성장 동력이 넘치는 국가	20.4%
부정부패 없는 신뢰 국가	5.7%
출산·노후 걱정 없는 국가	5.1%
치안과 안전이 보장된 국가	0.6%
민주·인권 강국	0.6%
일자리 걱정 없는 국가	8.1%
소득분배가 개선되어 모두가 잘 사는 국가	12.6%

※ 전문가 대상으로 정책제언을 오픈 설문으로 받아 워드 클라우드 작성



- 48 -